

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

KIEP 북경사무소 (mspark@kiep.go.kr, Tel: 86-10-8497-2870)

차 례 ●●●

1.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및 의의
2.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과정
3.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주요 제약 요소

주요 내용 ●●●

- ▣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내용이 포함된 <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「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」>을 발표함.

 -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목표는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,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, 국유기업의 현대 기업제도 구축 등임.
 - 이번 방안에서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, 국유기업의 유형별 감독관리 및 체제개혁 시행, 국유기업 간부 관리제도 개혁과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, 이사회 제도 개선과 건전한 회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.
- ▣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현 단계를 포함하여 4단계에 걸쳐 시행됨.

 - 1984년 도시경제체제 개혁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중소기업 개혁, 공사제도 및 지분제도 개혁, 직원배치 방안 등 일부 범위 내에서 탐색적 시범 운영을 전개함.
 - 1998년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저조로 3년 개혁안이 시작되면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부실한 중소 국유기업의 전면 퇴출을 진행함.
 - 2003년 국자위가 창설되고, 국유자산의 관리 및 개편, 유동화와 시장화 등에 대해 전문적·집중적·전략적 관리가 시작됨.
 - 2013년 3중 전회 이후 국유기업 소유제의 다양화 및 국유자본 이용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 중임.
- ▣ 중국정부가 80년대부터 시행해온 국유기업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음.

 - 국유기업 관리체제 개선의 제한성, 산업 내 독점으로 인한 기업성장 둔화 등이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함.

1.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및 의의

■ 2013년 11월 중국 중앙정부는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는 종합계획이 포함된 <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「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」>(이하 <결정>))을 발표함.

- <결정>은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발표하고,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,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, 국유기업의 현대 기업제도 구축 등을 핵심 목표로 제기함.

■ 2014년 7월 15일,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(이하 국자위)는 국유기업의 4항(项) 개혁안을 발표하여, 6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실시하기로 함.

- 6개 국유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△ 국유자본투자공사의 설립 △ 혼합소유제 시행 △ 법인구조 개선 △ 기울감사 조직 파견 4항 개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개혁 안을 모색하고자 함.

표 1. 국유기업 4항 개혁안

	시행 내용	시행 목적	시행 기업
1	국유자본투자공사 설립	· 국자위와 국유자본투자공사 간 관계 탐색	· 국가개발투자공사(SDIC) · 중량집단(COFCO)
2	혼합소유제 실시	· 효율적 경제발전 방안 모색 · 법인관리 구조의 변화 촉구 · 경영체제의 시장화 · 국유자본기능 확대 · 기업 경쟁력 강화	· 중국의약집단(CNPGC) · 중국건축재료집단(CNBM)
3	법인구조 개선	· 직권 확정 · 출자자의 기업 관리 범위 축소 · 이사회의 정책결정 역할 발휘	· 신흥제화집단(XXCIG) · 중국에너지환경보호공사(CECEP)
4	기울감사 조직 파견	· 국유기업 책임자 중점 관리를 통한 기울 감사방안 모색	(2~3개 중앙 국유기업을 선택하여 적용)

자료: 『인민일보(人民日报)』(2014), 『新一轮国企改革拉开大幕』, (7월 16일)

■ 제18기 3중전회 이후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 특성에 따른 분류 감독관리 및 체제개혁 시행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.

- 국유기업의 개혁은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의 심화, 국유기업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한 분류 감독관

- 리와 체제개혁 시행, 국유기업 간부 관리체제 개혁과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,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.
- 현재 국자위와 관련 부처에서 <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 「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」>(이하 <의견>을 제출한 상태로, 빠르면 연말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.
 - o <의견>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, 중국 언론들은 4대 개혁안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 국유기업 유형에 따른 감독관리 체제 시행안이 주요 내용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.

가. 혼합소유제 발전을 통한 국유자본의 경쟁력 제고

- <결정>은 혼합소유제가 경제 기본 제도의 주요 형식이라고 강조하며, 더 많은 국유경제 및 기타 소유제의 경제단위 혼합소유제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.
 - 혼합소유제는 국유자본, 집단자본, 비공유자본 등의 상호 융합이 가능하며, 국유자본의 기능 확대, 부가가치의 증대, 각종 자본 소유제의 상호보완 및 촉진, 공동발전 등에 유리함.
 - 국유자본 투자 프로젝트에 비공유자본의 지분 참여를 허가하고, 혼합소유제 경제단위가 직원들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함.
- 중국의 혼합소유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.
 - 첫째, 공유제와 사유제 간 구성으로 △ 중외합작기업, 중외합자기업 등 국유기업 또는 집단기업과 외자기업 간 결합으로 형성된 기업 △ 국유기업 또는 집단기업과 국내 사기업 간 결합으로 형성된 기업임.
 - 둘째, 공유제와 개인소유제 간 구성으로 국유기업의 직원이 회사지분을 보유하거나, 집단경제체제 내에서 개인이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 포함됨.
 - 셋째, 공유제 내부 국유기업과 집단기업 간 구성으로 도시 국유기업과 농촌 향진(鄉鎮)기업 또는 도시 집단기업 간 등 공유제 경제체제들로 구성됨.
- 혼합소유제는 국가의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자본형성 방식의 일환으로, 기업 자산구조 및 제도 개선에 유리할 뿐 아니라 중국 특색사회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.
 - 국유기업, 집단기업, 비공유기업의 자산구조 개선, 기업의 자본경제 체제에 적합한 기업제도 개선, 각종 소유제경제단위의 자산 유동 및 재편 등에 기회를 제공함.
 - 공유제와 시장경제 간 융합의 필수 노선으로 강조되는 혼합소유제는 실제 기업 자산권의 공동 보유 및 사용 등 다원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됨.

- 국유경제와 비국유경제는 모두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로, 국유기업은 정부의 거시경제 구조조정, 산업구조 최적화 등에 필요하며, 비국유기업은 시장 시스템의 기초 영역을 제공함.
- 국유자본이 담당하는 공공 인프라 건설 항목에 민간자본의 도입을 견인함으로써 투자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기업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경영효율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.
- 혼합소유제는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의 결합과 자원분배를 용이하게 하여 자산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업 국제화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.

나. 국유자산 관리체제의 강화

- <결정>에서는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유자본 위탁경영체제를 개혁하여 조건이 갖춰진 국유기업들이 국유자본투자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함.
 -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몇 개의 국유자본 운영회사를 설립하고, 정부는 기업 경영에서 투자자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시장화 및 민영화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.
 - 공익성이 강한 업종 및 분야는 국유자본 체제를 유지하고, 전략적으로 독점성이 강한 분야는 국유자본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허용함.
 - 국유자본은 국가 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, 공익 서비스, 전략산업, 생태환경 보호, 과학 기술 발전, 국가안보 등 국민경제 수준과 직결되는 업종 및 분야에 국유 자본의 비중을 확대 조정함.
- 국유자산 관리체제의 개선은 국유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경제구조 조정 능력 제고에 유리함.
 - 자원분배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는 업종간 자본이동 현상이 심화되는데, 자산관리체제의 개선으로 기업이 사업 분야를 확장할 때 수익률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시킴.
 -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 자원분배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, 정부 출자기업이 기업자산 소유권의 거래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 중 직면할 수 있는 난관을 비교적 용이하게 극복하도록 함.

다. 기업제도의 현대화 및 경영체제 개혁

- <결정>에서는 국유기업이 시장경제 체제를 기초로 기업제도를 현대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.

- 국유기업 경영체제에 관해 상호 협조와 효율적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법인 관리구조를 형성하고,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가의 역할 보장을 제시함.
 -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기업의 국유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유기업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종 방식의 행정 독점을 지양하도록 함.
 - 기업내부 관리인원의 승진 및 좌천, 직원의 입사 및 퇴사, 수입의 증가 및 감소 등의 유동성을 보장하고, 국유기업 관리인원의 급여수준, 직무대우, 직무소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.
- 기업제도의 개선은 제도 보안을 통한 경영 및 정책 결정의 규범화,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, 공평 경쟁,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중점 목표로 추진됨.
- 제도 보안은 재산권과 권리 및 책임 범위의 확정,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며, 이를 통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설정할 수 있음.
 - 전문경영인 고용 및 자본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통해 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투자자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자가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.
 - 합리적인 급여제도와 복리체제를 도입하고 실적에 따라 직무대우 수준을 조정하여 전체 직원들이 자발적·적극적으로 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.

2.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과정

가. 1984~97년: 시작 및 탐색

-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1984년 도시경제체제 개혁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탐색 기간을 거처옴.
- 1984년 제12기 삼중전회에서 <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「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」>을 발표한 이후 ‘청부경영책임제(承包经营责任制)’가 시행되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효과적 분리가 추진됨.
 - 청부경영책임제의 시행으로 국유기업은 정부로부터의 경영권 독립을 통해 자주경영권을 확대하고, 손익자기부담 체제를 도입함.
 - 동 제도는 기업이 이윤을 책임지고, 제품의 시장판매를 통해 이윤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계획 지향적 경영에서 시장 지향적 경영으로의 전환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.
 - 중소기업 개혁, 공사제도 및 지분제도 개혁, 기업 파산 퇴출, 직원배치 방안 등 일부 범위 내에서 탐색적 시범운영을 전개함.

- 시범운영 범위에 제한은 있었으나, 이후 대규모 개혁 시행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.
- 동 시기의 개혁은 단순히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 방식에 대한 기본적 역할 전환에 그쳤으며, 근본적인 체제의 개선과 효율적인 구조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시행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음.

나. 1998~2002년: 개혁 난관 극복 시도

■ 1998년,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며 저조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주룽지(朱鎔基) 前총리는 3년 개혁안을 제시함.

- 대형 국유기업 관리를 집중 강화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여 사실상 중소 국유기업의 전면 퇴출을 진행함.
- 몇 단계의 위탁 대리구조로 형성되고 위탁 단계별로 자본이 소요되는 국유경제의 특성상, 사기업에 비해 중소 국유기업은 그 효율성과 경쟁우위가 미미하다고 판단함.
-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기업 매각, 내부제도 개혁, 재산권 소유의 다원화 등 재산권 개혁 조치가 시행 됨.
- 경영 상태가 부실한 5,000여 개의 대·중·소 국유기업을 폐쇄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함.
- 정부조직에서 정리팀을 파견하여 폐쇄작업을 진행하였으며, 기업 폐쇄로 인해 실직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함.
- 부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직원들을 위한 ‘재취업센터(再就业中心)’를 설립하고,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도모함.
- 재취업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으로는, △ 기본 생활비 지급 △ 보험 제공 △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실시 △ 3차례의 취업 기회 제공 등이 있음.

■ 3년 개혁안은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.

- 국유경제 구조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부실기업을 도태시킴으로써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시킴.
- 사회적 파장은 컸으나, 개혁을 위해서 일부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음.

다. 2003~12년: 국자위의 개혁 시행

- 정부는 제16기 3중전회에서 <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 「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」>(이하 <결정>)을 발표하고,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혁과 혼합소유제 경제의 발전에 대해 논의함.
 - ‘국가소유, 대표분리(國家所有 分別代表)’의 개혁사상을 기초로 ‘3분리(三分開)’, ‘3통일(三統一)’, ‘3통합(三結合)’의 국유자산관리체제 시스템을 제시함.
 - 국가소유제 유지를 기본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투자자로서의 책임과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.
 - ‘국가소유, 대표분리’ 사상을 기초로 중앙정부는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, 주요 인프라 설비 및 천연자원 등과 관련된 국유기업에 대해 투자자의 책임을 이행하고, 기타 업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책임 범위를 확정함.
 - 정부와 기업의 역할, 정부의 공공사업 관리 기능과 국유자산 관리 기능, 소유권과 경영권 간 분리를 통해 권리, 책임 및 의무를 일원화하고 자산, 인력 및 업무에 대한 통합 관리를 추진함.
 - 혼합소유제 경제의 적극 발전을 통해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고, 공유제의 주요 실현방식을 위해 지분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함.
 - 채무, 현물, 지분, 지식 등을 포함한 각종 재산권이 소유제의 핵심이자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국유기업 재산권 제도 개혁을 가속화함.
 - 국유자본, 집체자본, 비공유자본 등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켜 공유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.

- 2003년 국자위를 설립하여 국유자산의 관리와 개편 및 유동화, 시장화 등을 전문적·집중적·관리하기 시작함.
 - 국유자산관리제도의 개선, 위탁 대리관계와 국유기업 경영자 간 연결기제 구축 등을 통한 개혁을 추진함.
 - 모든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, 자산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제도의 기반을 다짐.
 - 기업과 국자위 간 책임각서를 체결하고, 기업 연혁과 경영임기에 따른 실적 심사제도를 적용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책정함으로써 급여제도의 규범화를 추진함.
 - 국유재산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조하고 심의 및 외부감독 조치를 강화함.
 -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 시행을 통해 자금유실 문제 해결을 도모함.

라. 2013년~현재: 개혁의 新국면

-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개혁조치들로 인해 국유기업의 수는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국유기업은 직·간접적으로 중국경제의 생산과 투자활동을 주도해오고 있음.
 - 재정부의 재무결산보고에 따르면, 2012년 말 기준 중국 국유기업 수는 14.7만 개(금융기업 제외)로, 총자산 89.5조 위안(순자산 32조 위안)이며, 2002년 말 대비 총자산과 순자산은 각각 3.6배, 3.2배 증가함.
 - 이전 개혁조치들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얻었지만 자주경영, 손익자기부담 등을 둘러싼 기업발전 저해요소들이 존재함.
 - 국유기업 소유의 생산재에 대한 소유권, 사용권, 처분권, 수익권 등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고, 장기간 이어진 채무, 노동인력, 제도개선 등 문제가 기업자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활력을 저하시킴.
 - 내부인원에 의한 국유자산 관리, 이사회 감독기능 부실, 자산관리감독기관 운영의 효율적 기제 부재, 관리 미숙 등의 원인으로 국유자산의 유실 정도가 심각함.
 - 무분별한 경쟁상태, 사회적 부담 증가, 혁신역량 부족, 기업 내부의 심각한 관본위(官本位) 사상 및 불합리한 자원분배 등이 국유기업 경영효율의 저하를 초래하며 시장경쟁력을 하락시킴.
- 상기 문제들로 인해 제18기 3중전회의 <결정>에 포함된 국유기업 개혁 관련 내용에는 기존 개혁과는 다른 새로운 구상이 제시됨.
 -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국유기업 독과점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하고자 함.
 - 현 정부는 독과점형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가 부정부패를 초래한다고 판단, 이를 국유기업 개혁과 결부시켜 시장경제체제가 효과적인 경제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.
 - 정부와 기업 간 기능분리를 통해 국유기업 관리의 행정화를 추진하고, 기업 유형별 관리감독체제를 적용하여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킴.
 - 군수, 식량 등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 사업 관련 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중점 경영목표로 설정함.
 - 혼합소유제의 강화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재산권 구조의 규범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영인 고용제를 적극 지지하여 정부 간부체제와 비즈니스 체제 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함.
 - 재산권 소유의 다원화와 균형적 분배를 추구하고, 책임과 권리의 기준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기업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함.

3.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주요 제약 요소

가. 근본적 관리체제 개혁의 어려움

■ 지분관리체제의 개혁이 중국 국유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점형 대기업들은 사실상 지분제의 근본적 개혁에 불참하고 있음.

- 일부 지분제 개혁에 이미 참여한 국유기업들에서 여전히 불합리하고 개선되지 않은 지분구조 및 내부관리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, 국가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는 있으나 책임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없는 현상도 나타남.
- 책임의식이 부재된 지분소유권에 대한 관리로 인해 국가 지분 및 법인 지분의 거래 중단과 구조조정의 어려움도 초래됨.
- 최근 중앙기업의 재산권 구조로 볼 때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, 중앙기업 자회사들의 자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기업 차원의 지분 보유 다원화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음.

■ 국자위의 역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산권 관계 불명확 등 국유자산관리체제에 문제가 남아있음.

- 국자위가 ‘심판’과 ‘선수’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기업 이사회 구성의 최적화가 보장되지 않으며, 자산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인의 진정한 책임의식이 부족함.
- 국자위는 투자자 대표이자 감독관리 기관으로, 국자위 관리감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.
- 국유자산의 투자 기능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준이 모호해 재산권한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으로,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움.

■ 국유기업 유형별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함.

- 관리감독 방안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데, 중앙기업 독점 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공평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.
- 기업유형은 주로 공익성 국유기업, 독점형 국유기업, 경쟁 산업 내 종사 기업으로 분류되며, 대표적인 중앙기업 독점 산업에는 금융, 보험, 증권 등 분야가 포함됨.
- 독점 산업과 경쟁 산업 내 기업의 구성 비율 변화로 인해 이익 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, 동 변화에 따른 체계적 관리 시스템 및 장려기제가 필요함.

나. 국유기업의 독점지위 유지

- 현재까지 시행된 독점관리 조치들이 일정 수준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, 자연독점산업시장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.
 - 정부와 기업 간 기능 분리 시행에도 불구하고 항공, 철도, 천연가스 등 자연독점산업 내 국유기업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조치에 따른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.
 - 2014년 7월 『포춘』이 발표한 ‘중국 500대 기업’ 에서 시노펙, 페트로차이나, 중국건축이 1,2,3위를 기록했으며, 1위부터 19위까지의 매출액 상위권은 모두 국유기업이 차지함.
 - 현재 개혁은 기존 기업의 재편에 편중되어 있어,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음.
 - 내부적으로 개혁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, 혼합소유제 실현이라는 방향성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없어 사실상 관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.

- 자연독점과 행정독점의 결합이 산업기술 발전 및 혁신을 억제하고 있음.
 - 대부분 독점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이 아닌 저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업 실적을 제고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다. 기득권층의 보수적 태도

- 현재 국유기업 개혁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‘공공영역’ 에서 이익집단의 저항을 이겨내고 ‘민간영역’ 에서 기득권의 자본논리에 벗어나는 것임.
 - 국유기업 개혁 반대 세력의 입장에서 국유기업, 특히 중앙국유기업 및 지방 대형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체제의 기초 단위로, 개혁은 기업의 민영화로 결부되며, 이는 곧 중점 산업 및 영역에 대한 국가의 최종 통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음.
 - 중국사회과학원염정연구센터(中国社会科学院廉政研究中心) 쥐진원(剧锦文) 이사는 현재까지 재산권 개혁을 위주로 추진해온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에 이익집단의 저항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함.
 -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산권 개혁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원인 중 하나로, 재산권 범위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자산분배에 대한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기 때문임.

<참고자료>

- 『国企改革以管资本为主』(2014年1月), 「英才」.
- 『十八届三中全会《决定》与国有企业改革』(2014年1月), 「现代国企研究」.
- 『三中全会后的国有企业改革:问题与建议』(2014年3月), 「中国经贸导刊」.
- 『国企改革的困境与出路』(2014年3月), 「企业改革与管理」.
- 『国有企业改革问题研究』(2014年5月), 「经济论坛」.
- 『发展混合所有制经济与国有企业改革』(2014年6月), 「经营管理者」.
- 『中国国有企业混合所有制改革研究』(2014年7月), 「经济管理」.
- 『国企改革新构想』(2014年8月), 「中国经济报告」.

자료 정리: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조수영 (swimtiam@naver.com)